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지기제'

오리산업 멈추는 휴지기제



일부지역 10월부터 휴지기제 돌입
1년 절반이상 오리 못키우는 현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입식 전 환경검사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등 '보상제로'

AI 예방-가금산업 고려한
장기적인 방역대책 절실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하며 2011년 농림업 전체 생산액 중 7위를 차지한 오리산업은 한때 1조 3,966억원을 생산하며 황금기를 이끌어냈다. 2012년 당시 도입수는 9,040만9,000수로 최고 호황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끝없는 발전의 길을 걷던 오리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AI(조류인플루엔자). 2010년부터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AI로 오리산업은 악화일로로 걷게 됐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AI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오리산업에 대대적인 규제가 가해진 것이다. AI 방역정책의 골자로 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무기는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지기제였다. 오리산업의 休止, 쉬는 것이 아닌 산업을 정지하는 휴지기제가 시작됐다. 쉬는 것이 아닌 멈춰있는 오리산업의 휴지기제를 집중 취재했다.

●○

첫 휴지기 시행 후 문제 불거져

당초 휴지기제는 지난해 개최된 평창동계 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리 생산량 급감에 따라 오리가격이 폭등했다. 특히 오리 물량 감소와 복특수가 겹치면서 오리 생체가격은 3kg당 7,000원 초반대에서 휴지기제 이후 8,000원을 호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물가지수 불안감까지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계열업체들의 거래처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휴지기제 관련 제도가 상이해 지역별로 제각각인 오리농가 보상금액과 마리수 산정기준으로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됐다. 현장에서는 휴지기제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부족해 계열업체의 영업경쟁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농가 사육비가 형성됐다. 실제로 마리당 1,200원이었던 사육비는 2017년 말 2,000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9월 27일 세종시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전국 오리농가 총 결기대회를 열고 불합리한 5대 악법 철폐를 주장했다. AI 특별방역기간에는 철새 도래지를 비롯한 유희지에도 정기적인 소독이 시행된다.

결국 시설이 열악하고 입식 준비가 안된 농가로 입식과 과밀사육으로, 오히려 질병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됐다.

오리사육 휴지기제가 누구를 위한 시행이었는지 각계에서 의문이 쏟아졌다.

●○

2018년 휴지기제,

아스팔트 위로 오리농가 '내몰아'

지난해 두 번째 시행된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결국 전국 일천오리농가들을 세종정부청사 앞의 아스팔트 위에 세웠다. 정부가 당초 4개월로 예정했던 휴지기제를 연장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오리농가들의 공분이 거세졌다. 갈수록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오리사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농가들은 오리농사를 포기하고 계열업체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그 피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오리협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AI 방역조치를 빌미로 오리의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방역조치를 규탄하는 오리농가들의 목소리가 세종시로 집결된 것이다.

지난해 9월 27일 세종시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전국 오리농가 1,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촉구를 위한 전국 오리농가 총결기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의 오리농가가 참석한 결기대회에서는 오리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려는 농식품



부 방역정책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오리농가들의 목소리가 세종청사 앞을 가득 메우며 오리농가들을 살려달라는 청원이 이어졌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 10여명은 삭발식을 거행하고 오리농가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 강경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다.

협회는 △오리농가 사육제한 시행방안을 즉각 개선하라 △오리농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적용을 즉각 철회하라 △오리농가 입식 전 방역평가 시행방안을 즉각 개선하라 △지자체장에 대한 방역권한 부여를 즉각 폐지하라 △가축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농가피해 전액 보상하라 등을 요구했다.

단식농성 11일차, 위독해진 김만섭 협회장, 정달현 이사, 김성수 전북도지회장을 농성장에 남겨두고 한국오리협회 협상단은 밤을 새워 정부와 적극적 협상을 추진했다. 결국 10월 1일부터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

작됐고 경남 창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농성을 종료하고 오리농가들은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내용은 △겨울철 사육제한 오리농가는 수급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체농가의 25% 이내에서 시행 △사육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계열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은 11월부터 2월말까지 4개월만 적용(8개월은 미적용) △나머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타 축종과 공통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회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성단은 농성장 철수가 영원한 후퇴가 아니며 단지 AI 방역을 위한 일보 후퇴로 또 다시 생존권을 뒤흔드는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강경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시기는 생각보다 더욱 빨리 다가왔다.

●○

휴지기제 도래,

일부지역은 10월부터 휴지기제 들어가

실제 휴지기제 시기가 도래하면서 충북지역 등 일부 지자체는 11월부터 휴지기제를 적용하면 오리사육기간 상 11월 초에 출하될 수 있는 농가들에 한해 10월 초부터 휴지기에 들어간 농가들이 상당했다. 이들은 휴지기제 4개월 적용이 될 것으로 믿고 오리사육 휴지기제 들어갔다.

문제는 휴지기제가 종료되는 올해 2월 불과했다. 정부가 구제역을 이유로 오리농가 사육 휴지기제 1개월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2월로 종료될 AI(조

한국오리협회와 전국 오리농가 1,100여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AI 방역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 촉구'를 외쳤다.





AI 특별방역기간에는 철새 도래지를 비롯한 유흥지에도 정기적인 소독이 시행된다.



방역사들이 채혈을 하고 있다.

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될 경우 지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오리를 키우지 못하는 농가도 상당수 발생하게 되면서 농가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오리협회는 2월 13일 'AI 예방을 빌미로 가금산업 말살정책으로 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고 방역정책국을 즉각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해오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최근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한달 연장한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 2월 8일 AI 특별방역대책연장과 관련한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금업계의 공분은 높아졌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휴지기제에 돌입한 일부 지역의 오리농가들은 휴지기제가 한달 더 연장될 경우 6개월 동안 오리를 키우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협회는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오리농가 다시 아스팔트로 나서나

협회를 포함한 가금단체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현수막 및 구호제창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5,000여 가금농가들이 집결한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방역정책국 해체운동 및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최근 구제역의 발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과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3월 한 달 연장할 계획으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원인이었다.

가금분야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검출사례가 없고 현 방역시스템상으로 충분한 예찰이 가능한 관계로 참석자 전원이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방역정책국은 내부적으로 특방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의문을 표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중 입식 전 환경검사, 출하 후 휴지기 14일 등으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함에도 보상자체가 없고 지자체에서는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과도한 인력 및 예산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지기제 연장은 무의미한 선택이라는게 업

계의 중론이었다. 가금단체협의회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계획 즉각 철회하라! ▲가금류의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가금산업 말살정책 철회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비롯한 AI 방역대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라!- 일시이동중지명령, 이동제한, 사육제한, 살처분보상금을 비롯한 각종 보상 기준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

‘일촉즉발’ 싸우지 않고 이긴 오리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요청으로 총 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17일 실시한 면담에서 가금생산자단체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수용됨에 따라 당초 2월 19일로 예정했던 가금생산자단체 1차 궐기대회가 취소됐다. 가금단체가 주장했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계획 철회에 대해 방역정책국은 정부 및 지자체의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주최로 지난해 9월 14일 국회 건담회실에서 '오리농가 휴지기제 대책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장을 가득 메운 오리농가들의 열기가 뜨겁다.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농가들의 경우 출하 후 휴지기 미적용, 도축장 AI검사 강화 미적용 등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오리협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총궐기대회에서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오리농가 및 종란 폐기 추가보상 등을 신속히 이행키로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비롯한 AI 방역대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것으로 기록될지 모르는 이번 사태는 결국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물론 AI 방역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 단편적인 방역대책이 아닌 AI와 가금산업에 걸맞는 장기적인 방역대책이 강구돼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휴지기제는 올해 또 시행된다. 매년 전쟁을 되풀이 해야 하는 것일까. 오리산업을 위한 대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계 전체를 위한 제대로 된 방역대책이 필요한 때다.



농가 인터뷰

이원숙
윤호농장 대표

보상금 받아도 수익 40%이상 줄어 6개월이상 오리 못 키우는 상황

충북에서 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종 출하가 빨라 지난해 10월 3일 마지막 출하를 했기 때문에 휴지기 해제 예정일인 2월 말까지 휴지기를 실시해도 이미 5개월을 쉬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달 더 휴지기를 연장했으면 180일, 1년의 반은 오리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5개월의 휴지기제도 정부의 방침이고 산업을 유지하는 방편이라 생각해 눈물을 삼키며 지켰습니다. 휴지기제를 한달 더 연장한다는 것은 정부가 오리농가나 오리산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보상금을 받아도 전체 수익에서는 40% 이상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왜 개인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농가 인터뷰

박하담
금호농장 대표

산업 지키려 '올며 겨자먹기' 시행 "보상금 충분?" 말도 안되는 현실

정읍에서 2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휴지기제에 들어가는 농가들은 산업을 지키고 정부의 정책을 지키기 위해 올며 겨자먹기로 시행하는 겁니다. 휴지기제로 보상을 받으면 오리를 키우지 않고도 돈을 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보통 오리 사육 휴지기제로 마리당 보상을 받는 금액이 약 76원 정도 됩니다. 오리를 정상적으로 길러 출하하면 마리당 1,8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사육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 이득인지 숫자로도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의 오리농가들은 1만마리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1만마리를 키우려면 농장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땅을 놀려가면서, 농장을 놀려가면서 휴지기를 실시하고 싶은 농가가 얼마나 될까요. 보상금을 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생각입니다.

한국오리협회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결과

한국오리협회 요구사항	합의결과('18.10.07)
1. 겨울철 사육제한	
<p>(농가 선정기준) 법 상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여야만 함 ⇒ 오리 수급피해가 없도록 전체의 20%(180농가) 범위 내 시행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 영향에 최소화 되도록 방역이 취약한 반복발생 지역 등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한하여 사육제한 시행한다. - 전체의 25%(201농가) 범위 내 ○ 다만, 지자체 재량의 추가적인 사육제한은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행한다. * 농가명단은 필요시 구두상 확인
<p>사육제한기간은 마지막 출하일로부터 4개월이 아닌 2월말까지만 일괄 시행 (9월 15일부터 입식제한 수용불가/ 기존 오리가 입식되어 11월말경 출하하더라도 2월말까지만 사육제한 시행하고 사육제한 기간을 일일 계산하여 보상) * SI 비발생시 2.28일 가축 사육제한명령이 끝나는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 발생 위험기간인 11월부터 '19.2월까지 * 일일계산 방식으로 10월부터 입식제한 부분은 추가 보상하고 11월 이후 출하농가는 감액 보상한다.
<p>농가 보상금 산출식은 농식품부 임의 계산식이 아닌 SI 소득 안정자금의 70%로 적용하여 추후 논란이 없도록 조치(입식 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인 소득안정자금과 동일한 피해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기준 / 종란 폐기는 새끼오리 가격의 50%로 사육제한 전체 물량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농가의 97%가 위탁 사육농가로 사육수수료에서 농가 소요비용(일부비용제외)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776원 ○ 사육제한 기간 내 종란 폐기는 사육제한 물량의 100% 보상한다.
<p>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액 급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열업체 및 관련종사자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므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보상 및 운영자금 등 피해대책 마련 (용자의 경우 인센티브자금 지원기준상의 방역평가기준에 따른 아울 차등 미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2. 출하후 휴지기간 14일	
<p>겨울철 사육제한에 따른 생산량 급감 등 큰 피해를 고려하여 출하 후 휴지기간 적용기간을 조정 ⇒ 휴지기간 14일은 SI 위험시기인 겨울철 4개월(11월~2월)만 적용(S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의 경우도 미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부터 2월말까지 4개월은 출하후 휴지기간 14일 적용하고 나머지 8개월(3월부터 10월까지)은 적용하지 않는다.